

경제활성화 법안

I. 기업활력제고 특별법

(1) 법안 개요

- (개념)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
- (발의/소관위) 이현재 의원(15.7월), 산업통상자원위원회
- (한시법)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

(2) 주요 내용

- (지원대상)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재편 하는 기업에 제한
 - * 사업재편의 주된 목적이 지배구조 강화, 경영권 승계인 경우 승인대상에서 제외(안 제10조4항)
- (지원기간) 사업재편계획기간(3년) + 필요시 2년 연장 가능
- (지원절차) 기업 신청 →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 → 정부부처 승인 → 사후관리
- (지원내용) ① 상법상 절차 간소화(기간 단축), ② 공정거래법상 규제유예기간 연장, ③ 세제·자금 지원 근거 마련, ④ 근로자 사회안전망 제공, ⑤ 규제 불확실성 해소
⇒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고

(3) 기대 효과

- 과잉공급문제 해소
- 제조업 체질개선, 건설·유통·금융 등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
- 중소·중견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

- 중소기업·중견기업간 합병,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 등 중소기업 전문화·대형화
- 지역산업 체질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
 - 철강(포항·광양), 석유화학(여수·울산), 조선(거제·울산), 자동차(울산·광주) 등

Ⅱ.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

(1) 법안 개요

- (개념)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
- (발의/소관위) 정부, 기획재정위원회
 - * 국회 기재위에 4년 넘게 계류중(18대 국회 발의(11.7월) →19대 국회 재발의(12.7월))

(2) 주요 내용

-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
- 서비스산업 규제개선, R&D 활성화, 세제지원
- 서비스산업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위임

(3) 기대 효과

-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
- 제조업 싱글엔진에서 제조·서비스업 양축엔진 확보
- 서비스산업 선진국 수준 경쟁력 확보시 일자리 69만개 창출 (10/27, VIP국회시정연설)

Ⅲ. 노동개혁법

가. 근로기준법

(1) 법안 개요

- (개념)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방안 마련
- (발의/소관위) 김무성 의원(15.9월), 환경노동위원회

(2) 주요 내용

- (통상임금 범위)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, 제외금품은 시행령으로 위임
- (근로시간 단축)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규모 별 4단계 시행, 노사합의시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

(3) 기대 효과

-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 해소
- 근로시간 단축시 일자리 약 14~15만개 창출

나. 기간제법

(1) 법안 개요

- (개념)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가능성을 제고하고 생명·안전업무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남용제한
- (발의/소관위) 이인제 의원(15.9월), 환경노동위원회

(2) 주요 내용

-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 신청시 사용기간 연장(2년 → 4년)
-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횟수 제한(2년 범위내 3회)
- 생명·안전관련 핵심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

(3) 기대 효과

- 근속연장에 따른 숙련향상으로 정규직 전환가능 제고
- 고용안정을 통한 산업재해 및 인명사고 예방

다. 파견법

(1) 법안 개요

- (개념) 파견제도개선을 통해 고령근로자의 구직난,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
- (발의/소관위) 이인제 의원(15.9월), 환경노동위원회

(2) 주요 내용

- 고령자의 생산공정업무, 파견금지업무를 제외하고 파견 허용
-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

(3) 기대 효과

- 구직어려움을 겪는 고령자,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기회확대
-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인 뿌리산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

라. 고용보험법

(1) 법안 개요

- (개념)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제도의 운영 효율성 제고
- (발의/소관위) 김무성 의원(15.9월), 환경노동위원회

(2) 주요 내용

- 실업급여 인상(실직전 평균임금의 50% → 60%)
- 지급기간 확대(90~240일 → 120~270일)
-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%→80% 조정

(3) 기대 효과

- OECD 국가 대비 낮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여 실업기간 중 안정적 재취업활동 지원

마. 산재보험법

(1) 법안 개요

- (개념)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호
- (발의/소관위) 원유철 의원(15.9월), 환경노동위원회

(2) 주요 내용

-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단계적 도입('17년: 도보/대중교통, '20년: 자동차)

(3) 기대 효과

- 선진국 수준으로 업무상 재해 보호수준 강화(獨, 佛, 日 등)
- 현행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는 공무원과의 차별해소

[참고]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 지원내용

분야	지원 내용	구체적 내용
상법	▪ 간이조직재편절차 간소화	▪ 소규모분할 제도도입, 소규모합병·소규모분할합병·간이합병·간이분할합병 요건 완화
	▪ 조직재편 기간 단축	▪ 주총 소집기간 단축,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단축,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
	▪ 역삼각합병 허용	▪ 자회사 인수시 특허권, 브랜드 등을 유지하는 M&A 방식
공정거래법	▪ 기업결합심사 합리화	▪ 기업결합신고창구 단일화, 기업결합심사시 부처의견 고려 가능
	▪ 지주회사·상출제규제 유예기간 연장	▪ 동 규제 관련 유예기간을 1~2년 → 3년으로 연장
세제자금	▪ 세제·자금 지원 근거 마련	▪ 국세·지방세는 조특법·지특법에 규정
사업혁신	▪ 중소·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근거 마련	▪ 국내외 판로개척, 정보 제공, 경영·기술·회계자문, 판로개척, 전문인력 양성 지원
능력개발 및 고용안정	▪ 근로자 능력개발 및 실업예방 노력 의무	▪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예방 및 재직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 의무 부과
	▪ 근로자 능력개발활동 지원 근거 마련	▪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교육 지원
	▪ 전직지원금 지원	▪ 전직자 재취업·창업 촉진을 위한 전직지원금 지원
규제불확실성 해소	▪ 법령·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	▪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주무부처에 법령·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 요청 가능
	▪ 기업제안방식에 의한 규제개선 요청	▪ 규제개선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제출시 주무부처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